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엠바고 : 3.7일(목) 15시 이후 온라인, 3.8일(금) 조간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3. 8



국토교통부



목 차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4

1. 2019년 역점 추진과제 5

- ① 전방위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 ②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하겠습니다.
- ③ 지역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④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 ⑤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 신규 발굴 과제 20

- ① 수소경제 :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통한 자생적 성장
- ② 생활안전 중심의 SOC 관리 강화
- ③ 교통·물류 新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IV.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4

1.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2018년도 주요 성과

□ [성장동력] 대타협을 통해 건설·운수산업 체질 개선, 미래 대비

- 40여년 지속된 업역규제(종합, 전문)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 방안' 추진('18.12, 법 개정),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 일자리 질 개선*
* 임금 직접지급제 공공부문 우선 시행('18.1~), 적정 임금제 10개 시범사업('18.6~)
- 적정운임 보장, 과적 방지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18.4) 하고,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18.12)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18.12, 세종·부산), 자율차 가상실험도시 K-City 완공·개방('18.12) 등 혁신성장 본격 추진
- OSJD 정회원, 남북 도로·철도 착공식('18.12) 등 남북협력 기반 조성

□ [삶의 질] 시민 주거안정과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주거안정) 투기수요 차단(9.13)·공급확대(9.21, 12.19)를 통해 국지적 과열에 대응하고 재건축 규제 정상화, 청약 개편 등 실수요자 보호
 -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1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지원대상 및 주택유형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4.5만호 증가('~22)
- ☞ 과열지역 포함 전국 주택시장 안정세, 공공주택 21.3만호 공급 및 공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 전년 대비 39% 증가('18, 136.2만채)
- (교통 서비스)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 하고, 서울외곽 등 민자도로 3개 노선 통행료를 인하(970억원/年 경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 착공, C노선(덕정~수원) 예타 통과, 신안산선 실시협약('18.12) 등 광역 인프라 사업 가속화

□ [안전제고] 건설현장 및 교통 분야의 안전사고 감소

- 건설현장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굴착공사 등 고위험공사 안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18년 타워크레인 사망 無사고 등 안전 강화
-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18.1) 등 전방위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2년만에 3,800명 아래로 감소

□ [균형발전] 지역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역점사업 본격 착수

- 새만금공사를 설립('18.9)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
- 도시재생뉴딜 사업 18곳 착공, 99곳 신규 선정('18.8) 등 본격화,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 → 10년) 등 상생기반 조성

2. 평가와 반성

□ 건설·교통사고 감소속에서도, 연이은 안전사고로 국민 우려 비등

- 자동차 리콜대수 급증('12, 21만대→'18, 264만대, 6년간 10배 이상 증가), BMW 사태를 계기로 제작사의 결함은폐·리콜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요구
- 항공분야의 잦은 회항, KTX 강릉선 탈선(12.8), 기반시설 노후화* (온수관 파열 등) 등 빈번한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 증가

* 30년 이상 시설물(%) : ('18) 3,498개(11.1%) → ('28) 8,499개(27.0%) → ('38) 19,384개(61.7%)

□ 산업간 이해관계 충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 개선 필요

- 택시-ICT 카풀 업계의 갈등 사례와 같이 새롭게 출현한 서비스와 기존 산업 종사자 보호 문제가 상충하는 등 新-舊 업계 갈등 지속

* '18.4월부터 40여차례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 지연

- 항공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갑질 등 항공사 경영 윤리가 사회적 논란을 유발, 외국인 임원 재직 등 면허관리 행정 부실 지적

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거시경제) 세계경제는 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 증대, 국내경제 성장률은 2.6~2.8%대 성장세 고착 전망
 - 최저임금 인상(10.9%), 노동시간 단축 본격 시행 예정으로 건설 일자리 질 개선, 버스 공공성 강화 등 일자리 정책의 현장 안착 요구
- (국민생활)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 증가, 빈번한 철도·항공 사고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주택시장 안정세 유지속에 지역별 국지적 과열 및 침체우려 상존
 -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세밀한 교통개선 대책이 요구되며 O2O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 수요 증가

2. 업무추진 방향

◇ 국토교통 산업 혁신·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치 창출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안전과 편안한 일상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

- (혁신성장) 산업 혁신, 지역사업 조기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 7대 혁신기술을 확산하고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 체질개선 완수, 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좋은 근로여건을 제공하는 고용창출 지속
 - SOC 건설, 혁신형 산단 조성 등 조기투자를 통해 지역활력 제고
- (생활안전) 24시간 국민안전을 위한 과학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 등의 생애주기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설현장 및 교통 안전 차근을 위해 취약분야 집중 개선
- (편안한 일상)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교통 서비스 제공
 - 지역 여건에 맞게 주택시장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 광역교통 운영 효율화 및 인프라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
비전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방향

◇ 혁신성장 ◇ 안 전 ◇ 편안한 일상

주요
정책
과제

전방위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확산
-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개선
- 좋은 일자리 만들기과 해외진출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 관리

- 생활안전 SOC 관리 강화
- 공공·민간 근로현장 안전 제고
- 보행자 우선의 교통안전과 신속 대응

지역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 대비

-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 지역 투자 조기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균형발전 및 포용국가를 위한 미래비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 조성

- 공공주택 공급 등 맞춤형 주거지원
- 수요자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 구축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

-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효율화
- 교통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눈높이에 맞는 이용자 권리 체계 구축

1

2019년 역점 추진과제

① 전방위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1 개요

-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
-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 창출에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고,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과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고용 창출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①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구현

-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7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규제혁신, 첨단기술 R&D 등 중점 지원

<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19년 주요과제 >

수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대중교통 : (~'22) 수소 시내버스 2천대 도입('19년 35대) ▶ 충전 인프라 : (~'22) 고속도로 충전소 60기 구축('19년 10기 착공) ▶ 수소도시 : 연내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 3곳 선정
스마트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범도시 : 세종·부산 선도사업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19) ▶ 기존도시 : 민간 공모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 추진 ▶ 민관합동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19.2),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등 지원강화
자율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레벨3 상용화에 대비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기반 정비 ▶ 세종 정부청사 순환노선 자율주행버스 시범운영('19.10, 15인승 2대) ▶ K-City 인근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산단)' 조성, 완성형 산업생태계 구축
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역내 드론 상용화를 위해 '드론 실증도시' 선정('19.5) ▶ 드론 전용 교통체계 'K 드론 시스템' R&D 2단계 추진('19~'21) ▶ 드론 규제샌드박스 확대 지원, 안전성 인증센터 등 인프라 지속 확충
스마트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터키 도입(BIM, IoT 기반 안전관리 등 적용) ▶ 데이터 산업(건설사업정보시스템 등 정보 공개) 및 스마트 계측 산업 육성
제로에너지 건축(Z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공공건축물 의무화에 대비하고,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ZEB 임대단독주택단지 확대, 도시재생 지역내 제로에너지 마을 등 공공주도 확산
데이터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의 생산, 수집 및 유통 혁신 ▶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데이터의 지속적 개방 확대

②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재도약

① 지난해 마련한 건설·운수산업 혁신방안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촉진

▪ **건설산업** : 업역 폐지 등 제도개선을 이행하고 근로여건 개선

- 상호실적 인정, 발주제 개편안을 마련('19.10)하여 업역 폐지에 대비('21~, 순차 폐지)하고, 직접시공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간 차이가 큰 공종부터 표준시장단가를 정비하고, 준법등급 공개제도 신설('19.10) 등 부실업체 퇴출

-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임금 직불제를 공공공사에 전면 적용('19.6)하고, 우수 건설기업-특성화高 취업매칭 등 청년 일자리 지원

▪ **물류산업** : 운임제도 개선을 통해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 '20년 화물차 안전운임 시행에 대비하여 운임수준 공표*('19.10,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 비적용 대상에 대한 안전운송원가도 마련

* 2개 품목 원가조사 →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 심의後 공표

② 항공·부동산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항공산업** : 건전한 산업기반 조성 및 신규 사업 발굴

-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중대사고 또는 경영윤리 미흡 항공사에 신규운수권 배분을 제한(1~2년간)하고 임원자격 제한 강화*(~'19.9)

* (現) 항공법령 위반자 → (改) 조세포탈, 밀수출입, 배임·횡령, 폭행 등까지 확대

- 공정·투명한 심사를 거쳐 항공사 신규면허를 추진('19.3)하고 사천 산단을 중심으로 MRO 사업 본격 착수('19.2, KAI)

▪ **부동산산업** : 금융·IT 산업 등과 융복합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우량 공모·상장리츠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리츠를 활성화, IT 융합 등 부동산 창업 지원**

* 공모·상장 중심 법체계 구성, 공모리츠가 투자하는 사모리츠 규제 완화 등(「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 부동산산업에 대한 지원 차별 개선 추진, 부동산 산업 창업 경진대회 확대 등

3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및 해외진출 지원

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공 분야가 선도적으로 지원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18.5, 수립)의 일자리 창출·지원 과제 집행률을 제고*하고 정책 및 여건 변화에 따른 과제보완 추진

* (~’22) 4,700개 창업공간 조성, 9.6만개 일자리 창출, 3.3만명 혁신인재 양성
(’19년도 목표) 창업공간 126개소, 일자리 11,433개, 교육훈련 4,905명

- 흔들림 없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산하 23개 공공기관 약 6.5천명 전환 임용(전체 2.8만명 대상, ’18末 15,373명 53.9% 전환임용)

* ’18년 지정된 SR(390명), 건설기계관리원(5명)도 전환임용과 처우개선 등 적극 관리

2 혁신인재 발굴을 위해 건설·물류·항공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우수한 청년 인재 유입 유도

건설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싹인재 : 특성화高 취업지원 확대(’19, 전문건설공제 첫 지원 150명) ▶ 경력인재 : 건설근로자에 초급~마이스터 등급 부여 및 적정 임금 지급 연계
첨단물류	▶ 글로벌 물류인력(年 300명) 및 현장기능인력(年 400명) 중점 육성
항공전문	▶ 조종사 ‘先선발-後교육’ 규모를 확대하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19.10)
버스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단축 대비 군·경 운전인력의 버스운전 자격 취득 지원(1만명) ▶ 시간선택제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등 채용경로 다양화

3 ‘수주에서 투자’로 변화된 해외 인프라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단순 도급에서 벗어난 전략적 투자개발사업(PPP)을 지원

- **진출전략** : 신남방·북방 등 핵심사업에 정부·민간·지원공사(KIND) 등이 참여하는 팀코리아를 구성하고 진출·협력 패키지 마련
- **금융지원** :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및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확대 추진

* 한-아세안 협력펀드(1,000억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1,0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

2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를 관리하겠습니다.

1 개요

□ '삶 터'에서 '일 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체계 혁신

- 건축물·기반시설의 노후화, 투자 자원 부족 등으로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해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대응
- '22년까지 건설현장 및 교통안전 분야의 안전사고를 절반('17년 대비)으로 줄이기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

* 건설 : ('19)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자 400명대 감축 → ('22) 250명대 감축
교통 : ('19) 교통사고 사망자수 3,200명대 감축 → ('22) 2,000명 수준 감축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화재·지진 대응 능력 강화

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규모 건축물과 건축 자재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개선

- 점검의무가 없던 소규모 시설물도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 등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 추진('19.10, 「시특법」 개정)
-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19.10, 案마련)하고, 품질관리서 작성 제도 확대*('19.10)

* (現) 복합자재, 내화구조 → (改) 방화문, 단열재, 방화댐퍼 등 추가

② 안전기준 강화前 허가된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화능력 보강을 지원, 지진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진 보강 신속 추진

- **화재대응** : 대형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에 보강비용 우선 지원('19, 96억원, 국가:지방:민간 = 1:1:1), 다세대 주택 등은 저리용자 지원('19, 500억원)

* 의료·노유자·수련시설, 아동센터, 일부 다중이용업中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취약시설

- **지진대응** : 다중이용시설 등 우선 보강 필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내진성능 간소화평가 시범추진('19.6)
- 철도·공항 등 주요 SOC 내진성능을 확보('19, 98.1% → '21, 100%) 하고, 既보강된 시설물도 적정성 실태조사('19.4~) 등 관리 내실화

② 근로현장의 작업자 안전 제고

①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 원년'으로 삼고, 건설기계 등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

- **추락사고** : 공공공사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 의무화, 민간공사는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 '추락사고 저감 종합대책' 수립('19.3)
- **건설기계** : 검사제도를 종합 개선하여 부실장비를 근절('19.9)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 실시
- *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되는 소형(무인) 면허를 기능사 자격이 필요한 대형(유인) 수준 상향
- **굴착공사** : 굴착공사前 계획계획 수립 강화('19.6, 「건진법」 하위법령 개정)

②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19.7)하고 발주청의 감리인원 현장 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

③ 국토교통 유관 공공 작업장부터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인명 사고가 빈번한 택배현장 등도 관리

- **공공작업장**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하기관(LH·도공·코레일·철시공) 현장을 중점 관리하고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 시행('19.4~)
- 고위험 고속도로 작업장의 사고방지 종합대책 마련('19.5), 연내 철도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및 최신장비 활용 확대
- **민간작업장** : 택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19.12)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 강화
- 항공 승무원 피로관리('19.10~), 방사선 피폭량 실측('19.4~) 등 추진

③ 보행자가 우선 되는 교통안전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① 교통사고 사망자수 3,200명대 감소를 위해 안전한 보행 인프라 구축

- 교통사고 저감의 핵심 정책인 도시부 60→50km/h 속도 하향이 조기 정착되도록 지역별 교통안전 평가에 추진실적 반영*

* '19.상반기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2년간 유예기간이 있으나 조기도입 추진

-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운행기록장치 시범사업('19.8)을 추진하고, 사업용 화물차 차령 및 전세버스 안전 관리 강화

② 철도 및 항공 분야의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간 유기적 협업 활성화

- **철도안전** : 내실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가칭)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운영('19.6)

-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19.6)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19.1~),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 제고

- **항공안전** : 사고유형을 안전 지표화하여 상시 모니터링('19.3~)하고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측정 확대('19.2~) 등 관리수준 상향

- 회항 등 돌발상황 신속지원을 위한 모의훈련 등 범부처 협업('19.1~)

④ 자연적 위해 요소부터 안전 확보

① 폭염 대비 도로·철도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 SOC 풍수해 재난대응 표준절차 마련('19.6)

②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건물·수송 분야 정책 대응 강화

- **미세먼지** : 친환경 소형 화물차(1.5톤미만 전기·수소차) 도입,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차량 운영을 확대

-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3020' 등 정책기조에 맞춰 건물·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제시

③ 지역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 개요

- 도시재생, 새만금 등 지역투자 프로젝트 사업 착공,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가시적 성과 창출
- 3만불 시대·인구감소·저성장·한반도 평화 등 미래 이슈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삶의 질 개선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 ① 도시재생으로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 주민 참여 확대 및 등지내몰림 현상 예방 등 상생형 도시재생 추진
 - **속도 제고** : 신규사업을 조기 선정('19.3~, 100곳 내외)하고 절차 간소화
 - * '17년 선정 68곳 연내 모두 착공, '18년 선정 99곳 중 최소 20%(19곳) 상반기 조기착공
 - ** 사업 선정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던 2단계 절차를 통합(사업 선정 + 활성화계획 수립)
 - **혁신역량 강화** : 구도심 철도역, 항만 등 거점 지역에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 착수(3곳 내외)
 - * 공공(지자체·공기업 등) 초기투자로 사업 위험을 낮추고 입지규제 특례 지원('19.6, 「도시재생법」 개정)
 - 창업 지원 등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 본격 조성('19.1~, 전북 익산 등 30곳), 모태펀드內 국토부 도시재생계정 신설 등 금융지원 강화
 - **참여 확대** :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240명) 및 도시재생대학 상설화
 - 상생협력상가 200호를 본격 공급('19.1~)하고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19.4, 보호범위 90→95%), 임대동향조사 확대 등 임차인 보호

②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생활 SOC 제공의 핵심 플랫폼으로 조성

-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지역에 적용*

* '20년 이후 전국 확산을 위해 법 개정('19.2, 「국토기본법」 개정안 발의)

- 도시재생사업지 내에서 각 부처의 생활 SOC 사업을 연계한 생활 SOC 복합시설 브랜드 사업(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추진('19.3~, 20곳)

* 각 부처의 생활SOC 시설이 복합 입주하고 지역의 사회적기업, 주민조합 등이 운영

② 지역 투자 패스트트랙 지원 및 인프라 확충

①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新산업 창출, 지역주도 투자 지원 강화

-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캠퍼스 첨단 산단*」을 조성하고 판교 2밸리 기업성장센터를 착공, 진주·사천·밀양 국가산단 분양

*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패키지 지원(규제개선, 부처 협업사업 지원 등)

- 非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공모('19.1), 중앙-지방정부 협약 체결('19.5) 등 시범사업 본격착수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 예산을 지원

-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의 산업기능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에 총 19조 7,85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 및 조기착수 지원('19.1~)

※ 예타면제('19.1) 국토부 사업 :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제2 경춘 국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 서남해안 관광도로, △ 충북선 철도 고속화, △ 석문산단 인입 철도, △ 동해선 단선 전철화, △ 남부내륙철도, △ 대구산업선 철도, △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 대전도시철도 2호선, △ 도봉산 포천선, △ 새만금 국제공항 등

②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거점간 경제 교류 활성화

- 도로·철도 : 수도권 광역 도로교통망 등 간선망 247km 착공,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등 용량 확충('19.7, 기본계획 착수)

- 공항 : 제주·대구·김해·청주 등 거점공항 시설 확충, 충분한 협의를 거쳐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갈등관리 및 기본계획 고시 추진

3 균형발전 사업의 성과 가시화

- ① **새만금** : 공공주도 매립 착수 등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선도사업(새만금공사 주도 0.3GW) 추진 및 연관기업 유치
* 국제협력용지 6.6km² 매립·개발, 사업비 1.15조원, 목표인구 2.1만명('24 완공)
- ② **행복도시** : 신청사 착공지원(실시설계, '19.10), 국제기구 유치추진 등 행정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광역권 상생협의체계 강화('19.3)
- ③ **혁신도시** :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19.6, 법 개정), 정주여건 개선, 도시별 발전계획 실적평가 등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성과 가시화

4 포용적 국가를 위한 국토교통 미래비전 마련

- ①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이슈를 반영한 2040 분야별 중장기 비전 마련
 - **국토** : 국민 참여단·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향식으로 마련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시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19.11)
* 포용·인구감소 등 핵심이슈는 국가차원의 전략 제시하고 구체적 이행지침·지표 등 반영
 - **교통** : 자율 주행기술, 환경·에너지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1~'40)' 수립 착수('19.6)
* 안전·복지 등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위상 제고, 유라시아 시대 대비 공간 범위 재설정
※ 미래 국토교통 기술이슈를 예측 대비하는 「국토교통 미래기술 2050」도 마련
- ②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비전을 마련하고 대내외 여건 고려를 바탕으로 남북 경협을 단계적으로 이행
 - 「한반도 新경제구상」(통일부 주관) 등과 연계한 단계별·부문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새로운 경제 활로 마련 및 공영 기반 구축
* 초기의 안정적 경협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 방안 검토

4.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1. 개요

- 신혼희망타운, 청년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고도화하고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집중 강화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세밀한 주택시장 관리 강화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공공주택 공급 등 맞춤형 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 주거복지로드맵 104.5만호 공급계획 중 '19년 20.5만호 공급(37.8% 달성)
 < 공공주택 계층별 공급 목표(단위 : 만호) >

공급유형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104.5	19.0	20.5	21.0	21.7	22.3
공적임대 소계	89.5	17.2	17.6	18.1	18.2	18.4
청년 (실)	21.0 (27.0)	3.6 (4.8)	4.1 (5.3)	4.3 (5.5)	4.5 (5.7)	4.5 (5.7)
신혼부부	25.0	3.3	4.6	5.2	5.8	6.1
고령자, 취약계층	43.5	10.3	8.9	8.6	7.9	7.8
공공분양(착공)	15.0	1.8	2.9	2.9	3.5	3.9

- ① **신혼** :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착공) 및 특화설계방안 마련, 국민임대·행복주택 특화단지* 추진,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
 * 국민임대 6천호 입지 확정('19.3), 신혼특화 행복주택 2천호(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
- ② **청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1천호), 희망상가(80호) 공급하고,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근거를 마련(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19.6)
- ③ **고령** : 고령자복지주택 및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1천호) 공급,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 개발 추진
- ④ **취약계층** :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3천호) 공급,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 인상 및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

②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 구축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입주자 관점에서 적극 개선

- **단계적 유형통합** :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의 유형통합(영구·국민·행복 모델 마련('19.9, 평형별 공급비율 임대료 기준 등) 및 선도단지('20년 사업승인분) 선정
- **대기자 명부** : 입주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대기자 관리를 위해 입주자 관리지침*('19.3) 및 통합검증 시스템 마련('19.12)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모집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명부관리
- **10년 공공임대** : 주택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입주민에 분양전환 또는 임대연장 지원('19.5,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 발의)

② 주거형태 다양화 및 주택품질 제고로 국민 주거권 향상

- **사회주택** : 지자체 중심으로 소규모·수요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개발가능 토지 발굴 및 시범사업('19~, 年 1,800호 건설형 공급)
- **빈집 활용** :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 도입('19.10)
- 정보부족으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도심內 빈집을 연결할 수 있는 빈집활용 플랫폼 시범 구축('19.10)
- **주택품질 제고** : 입주前 사전방문제도* 및 품질점검을 강화하고, 하자판정기준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19.9, 「주택법」 등 개정)
* 사전방문 표준체크리스트 마련 및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 의무화

③ 공정한 민간 주택임대시장 조성

- ① 임대등록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고도화('19.10)
- ②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료 증액규제 등 의무 이행과 세제혜택 연계('19.6, 종부세 등 법령 개정)
 -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19.3, 「민간임대법」 개정안 발의), 모바일·인터넷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④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조성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① 정비사업·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 강화

- **정비사업** : 정비업자 업무범위 명확화*,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업체 영구 배제(3진 아웃), 정비업자도 선정비리 시 입찰 무효 등 처벌 강화
 - * ①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② 추진위·조합에 정비업자 등 자금대여 제한
- **재개발** : 정비계획 수립 시 정보제공 강화*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상향, 세입자 참여 협의체 구성 및 동절기 퇴거 제한 등 권리보호 강화
 - *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분쟁 및 사업지연 방지
- **지역주택조합** : 조합 설립前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추진

②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격 동향조사,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 지방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 차원의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추가 개선 검토 등 맞춤형 대응
- 청약 시스템 공공성을 강화하고, 분양가 심사 강화·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19.3)
 - *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19.10), 부정당첨자 공시 및 계약 취소 의무화 추진('19.11)
- 집값 담합행위 금지·처벌,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및 업·다운계약 조사강화 등 부동산 거래단계별 질서 확립

③ 공시가격의 유형·지역 간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 개선

- 서민 부담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 추진

④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계획(9.13) 관련 광역교통·복지 등 주거 인프라 대책과 결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급 추진

- * 1, 2차 발표 19만호는 연말까지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 * 잔여 물량 공급방안은 '19.6월까지 확정

5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 개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혁신

* 평균 출퇴근 시간 : 수도권 90분 ↔ OECD 평균 28분 / 교통혼잡비용 : 연간 21.3조원
수도권 광역교통 혼잡도 : 버스 138~185% / 철도 110~236% / 도로 116%

-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이용 품질을 높이고 지역·수요자별 차별없는 보편적 교통 서비스 제공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효율화

-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를 통해 지자체 갈등으로 지연·무산된 광역버스 확충·운영 효율화 등 핵심사업 중점 추진

- M-버스 노선 및 운행범위를 확대(수도권→광역권, '19.7)하고,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Super-BRT 도입('19.10)
- 그간 투자가 미흡했던 환승센터, BRT 등 광역교통 운영·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 투자재원 마련 추진

2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급 속도 제고

- **광역급행철도** : A노선(운정~삼성, '18.12 착공)을 속도감있게 건설, C노선(덕정~수원)은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착수('19.6)

* B노선(송도~마석)은 '19년중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 신안산선은 인·허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착공하고,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용산-신사 등 구간도 사업 조기 추진방안 검토

- **기존선 개량** : 경부선(서울-천안)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 운영을 확대('19.10), 분당·과천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조속히 완료(~'20.6)
- * (現) 50분 간격 日 34회 운행 → (改) 30분 간격, 日 54회 이상, 금정역 정차 가능 등

2 교통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1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응, 노선버스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민자도로 통행료 합리화 등 공공성을 강화

- 광역· 시내 등 버스 성격별로 정부-지자체 역할 재정립,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버스 서비스 도모

	현 재	개 편
M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면허(국토부, 한정면허) • 수익모델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면허(대광위, 한정면허) • 수익모델 기반(탄력운영확대)
광역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면허 • 국고지원 없음(지자체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광위 면허권 일원화(국가사무) • 국고지원(준공영제 확대 등)
시내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면허 및 자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면허체계 유지 • 운영체계 개편 지원(준공영제 확대 등)
대중교통 취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자체 운영 * 100원 택시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원 강화 * 100원 택시, 공공형버스 일부 지원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18.8)을 이행('19.1, 구리-포천, '19.12, 천안-논산 등)하고 관리·감독지원 전문기관(교통研)을 통해 운영 합리화
- 고속·시외버스 정기권 등 상품 개발('19.7~) 및 광역알뜰카드 도입 확대('19.5), 철도운임 할인 확대('19.1, 다자녀·임산부·유아·기초수급자)

2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 **도로** : '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계획을 수립('19.10)하고 연내 중부내륙선(충주휴게소) 1개소 준공 및 경부선 등 4개소 착공
- **철도** : 공공형 택시, 카셰어링 전용 구역을 확대하고 SNS로 연계교통,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하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 도입
- **항공** : 「수하물 위탁 서비스」 시범운영('19.5~, 제주항공 인천노선),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탑승수속 서비스 확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용자 권리보호 체계 구축

1 BMW 차량화재 사고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동차 리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 검사 신뢰 제고

* 「자동차관리법」(‘18.9, 발의) 및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

<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18.9) >

- ▶ (제작사 책임강화) 리콜 쏠단계에서 필요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결함 능력 대응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등 제재 강화
- ▶ (선제적 결함조사)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 결함 조사를 착수토록 리콜요건 명확화,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선정기준 다양화·객관화
- ▶ (조사기관 보강) 제작결함 조사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 ▶ (공공안전 확보) 리콜차량 중 화재 등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해시 국토부장관이 운행제한, 판매중지 가능토록 권한 부여

2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19.5)하고 사업자 귀책 시 지연 승차권 취소·환불 위약금 면제(약관개정, ‘19.6)

- 항공기 지연율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19, 인천공항 시범운영)하고, 이륙 직전 항공기 하기 시 환불규정을 개선(‘19.8, 수수료규정 개정)

* (우리나라) 이·착륙 기준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초과 시 지연으로 집계 (국제기준) 게이트 출·도착 기준 국내·국제선 모두 15분 초과 시 지연으로 집계

3 교통 약자, 교통 취약지역에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 **기본권 도입** :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교통기본권’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지원 의무를 부여

* 교통기본권 도입 방안 검토(~‘19.4), 공청회 등을 거쳐 법률 개정 추진(‘19.6)

- **교통수단 확대** :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19.10),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 도입(‘19.10, 4~7개 노선)

*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 편의제공 등 항공교통약자 편의기준 시행(‘19.3)

- **취약부문 지원** : 농어촌·벽오지에 100원 택시, 콜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62개 시·군, 552억원 지원)

2

신규 발굴 과제

① 수소경제 :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통한 자생적 성장

1 개요

- '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소 대중교통 전환을 통한 실증 및 수소차 확산 견인

* ('19.1)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 전환을 통해 수소차 양산 기반 마련
- 고속도로,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지역 거점에 수소 충전소 건설

- 수소 에너지를 생산·활용하는 「수소에너지 기반 실증형 시범도시」 조성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① '22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2천대 도입(~'40, 4만대)

* ('19) 35대 → ('20) 300대 → ('21) 665대 → ('22) 1,000(순증 기준)

- ① **복합환승센터** : 주요 교통축에 수소버스 충전·정비 인프라를 갖춘 수소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여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전환*

* 서울시내 ↔ 환승센터 ↔ 경기도 노선 신설시(노선당 8~10대 추정) : 약 200대

- ② **인센티브** : 수소버스로 대·폐차시 운영 보조 및 친환경 연료 보조금 신설 검토*, 수소버스 도입시 면허기준 완화 등 추진**

* 「에너지패러다임 전환 및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연료보조금 체계 개편」 연구('19.3)

** 운송사업 면허대수 산정시 친환경 차량 가중치 상향 등('19.6,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

- ③ **안전기준** : 승객 보호를 위한 수소버스 안전기준 마련 R&D 추진

* 산업부, 환경부는 수소 충전요금 지원, 연비·내구성 향상 등의 기술개발 추진

② 고속도로·지역거점에 「수소충전소」 본격 확충(~'22, 범부처 310개소)

① **고속도로** : 휴게소 등에 '19년 10기*(누적 총 18기) 착공(~22, 60기)

* 백양사(순천방향), 성주(창원방향), 여주(인천방향), 함안(순천방향) 등

② **지역거점** :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주요거점에 설치하고 입지 규제개선 병행, 공영차고지내 건설 MOU 체결('19.9, 지자체 등)

* '21년 건립 예정인 新청사 인근에 수소충전소 건설('19 충전소 설계 → '20 착공)

③ 「수소에너지 기반 실증형 시범도시」 3곳 조성('19.6 시범모델 구상, '19.12 선정)

① **시범도시** : 신도시 및 수소 활용 선도지역에 선정하고, 수소도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19.6, 기획연구)하여 마을·주거단위에 실증

* (기존도시형) 수소충전소, 수소 공동주택·오피스 연료전지 등 실증
(대규모 실증형) 도심 수소 생산시설, 수소 파이프라인, ICT기반 수소관리체계 등 실증

② **제도기반** :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소 에너지 도시인프라 기준 및 수소친화적 도시 설계기법 마련

* 수소도시의 효율적 조성·운영, 규제특례 등을 위한 (가칭) 「수소도시법」 제정 검토

② 생활안전 중심의 SOC 관리 강화

1 개요

□ 기반시설, 지하시설물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취약시설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보강

* 20년 이상 지하시설물 : 송유관(95%), 전력구(45%), 가스관(33%), 열수송관(32%) 등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원인 분석 및 전략적 보완

○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DB 구축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보강

□ 노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안전강화 TF*를 구성 ('18.12)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종합대책 마련

* 구성 : 국토부(단장 : 1차관), 국조·기재·산업·환경·과기·행안 등 9개 부처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생활안전 위협요소 발굴 및 선제적 안전 투자 강화

① **위협요소 발굴** : 건축물·기반시설 노후화,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시설물·관리 시스템 등)를 집중 발굴('19.4)

- 안전시설·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위험도·파급력을 감안한 전략적 보강

* '국토교통 시설물 안전 수준 및 사고유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19.3~9, '19.10 발표)

② **안전투자 확대** : '지속가능한 시설물 안전 확보' 패러다임에 맞춰 중기 계획을 통해 '유지·관리형 선제적 투자' 비중 확대

* 예 : (~'23) 우리부 SOC 예산중 안전예산 30% 확보('19, 15.8조원中 3.9조원 약 24.7%)

2 체계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고도화

① **관리체계 구축** : 도로·철도 등 SOC 외에, 열수송관·가스 등 지하 시설물까지 「기반시설관리법」('20.1, 시행) 대상*에 포함

* (총 15종) 도로·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 + 가스·통신·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

- '20년 법 시행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19.10) 등 관리체계 사전 준비

- '범부처TF'를 통해 실태조사 및 보강을 실시하고 종합대책 마련('19.6)

② **시스템 고도화** :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이력, 예산투입 이력 등을 조사하고 DB化('19.8, 시범조사 → '20.1 본조사)

-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확대 및 정보 추가·보완 계획 수립('19.10)

* (지역) '20년까지 市지역 구축 완료, '23년까지 郡지역으로 확대

(시설) 현행 15종(시설물6종, 구조물6종, 지반3종) + 민간 통신구·송유관 추가 검토

-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하고 민간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등 추진(국정원 협의)

③ 교통·물류 新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1 개요

- ICT·공유경제 발달, 여가 활성화 등으로 급성장한 택배 서비스, 자동차 튜닝, ICT와 결합한 교통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 적극 육성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① 택배시장 성장에 대응한 「생활 물류산업」 육성

- ① 전자상거래·ICT 발전·O2O 활성화에 따른 택배시장 성장('18, 25.4억 박스) 등 생활변화 지원을 위해 생활물류 산업 본격 육성
 - 기존 화물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 체계 혁신,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19.4, 제정안 발의)
 - * '택배'와 퀵·배달대행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이륜차배송업'(중개업자 대상) 업종 신설
- ② 신규차량 허가 등 규제완화, 시설투자 지원과 함께 서비스 개선 유도

② 고부가가치 산업 및 미래 교통수단 성장 지원

- ① 튜닝산업 :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 가능(現 승합차만 가능) 토록 차종체계 개선 및 안전 확보('19.11, 「자관법」 개정)
- ② 택시서비스 다양화 : 모바일 플랫폼 활용 및 사업자간 브랜드화 확대로 서비스 다양화·차별화 유도('19.6,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O2O 플랫폼상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운행경로 예상, 택시 예약 등),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선('19.10, 「자관법」 시행규칙 개정)
- ③ 2030 모빌리티 로드맵 : 미래형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구체화*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예 : (1단계) O2O, 모바일 기반 혁신 토대 조성 → (2단계) 교통 빅데이터 혁신 → (3단계) 자율차 시대 교통체계 개편 → (4단계) 미래형 도시교통체계 정착

IV.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주요과제	국민체감 성과
1	전방위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p><혁신성장 및 주력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시내버스 35대 도입, 고속도로 충전소 누적 18기 착공 ▶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지 조성 ▶ 드론 실증도시 선정으로 도심내 드론 활용 활성화 ▶ 임금직불제 공공공사 전면 적용으로 임금 체불 근절 가시화 <p><일자리 및 해외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공간 126개소, 일자리 11,433개, 교육훈련 4,905명 ▶ 3조원대 규모의 글로벌 모태펀드 조성
2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자) '19년 400명대, '22년 250명대 ▶ (교통사고 사망자수) '19년 3,200명대, '22년 2,000명 수준 ▶ (철도 운행거리 1억km당 사고건수) '19년 4.5건, '22년 3.7건 ▶ (항공 100만 비행횟수당 사고건수) '19년 2.0건, '22년 1.54건 ▶ (SOC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19년 98.1%, '21년 100%
3	지역경제 회복 및 포용적 미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뉴딜) '17년 68개소, '18년 99개소, '19년 100개소 내외 ▶ (노후 산단 재생, 누계) '19년 28개소, '22년 37개소 ▶ (균형발전) 새만금 선도매립,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투자 유치 ▶ (인프라 사업) 도로 간선망 247km 착공, 평택-오송 및 남부내륙 철도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제주·청주 등 지역공항 시설 개선
4	마음 편히 거주하는 주거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임대 17.6만호 : 청년 4.1만호, 신혼 4.6만호, 고령자 0.9만호, 취약계층 8.0만호 ▶ 맞춤형 주거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 취약계층 및 중기 취업 청년 5.3만명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 신혼 : 8만가구 대상 구입·전세자금, 신혼희망타운 수분양자 대상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5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 '19년 85km, '22년 55km ▶ (고속철도 일일 수송량) '19년 23.7만명, '22년 25.8만명 ▶ (저상버스 보급률) '19년 27%, '22년 42.2% ▶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 '19년 법정대수 확대, '22년 100% 달성 ▶ (항공 여객 수송) '19년 1억2천5백만명, '22년 1억5천만명 ▶ 구리-포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3,800원 → 3,600원), 천안-논산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19.12) ▶ 시외버스 정기권, 광역교통 알뜰카드 확대로 20~30%수준의 교통비 절감